

가야문화권 별도 법안 제정되나?

국회서 연구·조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공청회... 송하진 지사 "전북 가야 위상 제정립돼야"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7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9면> 이날 공청회는 이미 발의(이완영·민홍철 국회의원)되어 국토위에 보류중인 가야역사문화권 특별법안이 정비에 초점을 뒀 경상가야 중심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북가야 등 연구조사가 미진한 지역에도 국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안호영 국회의원이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해 발의하기 위해 자리를 가진 것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전북 가야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철과 봉수왕국' 전북가야를 보여줄 수 있는 제철 유적이 전북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북 가야의 위상은 제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가야문화권 특별법'이 마련되면 조사·연구 및 발굴·복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뿐 아니라, 즉 활용과 관련된 전담기관 설립이 가능해져 전북가야 역사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높이는 획기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광장군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이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과제'를, 홍성덕 전주대 교수가 '국가균형발전과 가야사 특별법의 방향'을 주제로 발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 회동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제했다.

종합토론회로는 손덕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을 비롯한 김동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유철 전북문화유산 연구원장, 최인선 순천대 박물관장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93억 원의 가야사 연구 및 정비 예산을 확보해 중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등 전북가야의 실제규명 과 정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

다.

또한 문화재청 정책을 수시로 공유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시·군 및 지역 정치권과도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장자연 사건' 재조사 될까?

검찰 과거사위, 내달 2일 논의... 포함 여부 주목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내달 2일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전날 열린 9차 회의에서 2차 사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

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오는 4월 2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달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12건을 재조사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선정된 12건의 1차 사건 조사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김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초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

다. 다만 당시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을 포함해 ▲정연주 전 KBS 사장

장자연 ▲미네르바 사건 ▲정윤희 문건 사건 등을 1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과거사위는 제외된 사건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2차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과거사위의 2차 조사 권고 대상에서 장자연 사건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른바 '장자연 문건' 등이 나오면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됐다.

장자연 사건은 술한 의혹만 남긴 채 명확한 사실 규명 없이 끝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최근 과거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卍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20만 5500여명을 넘어 서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자연 사건이 지난 1차 대상 사건에서 제외된 만큼 2차 대상에는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니만큼 권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

했다. /이상민 기자



문건 나오면서 수사 이뤄졌으나

의혹 제기된 유력인사 '무혐의'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8곳 선정

도, 육성위원회서... 일자리창출 28곳 147명도

전북도는 27일 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열고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8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8개 기업에 147명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가능 여부, ▲사회적기업의 인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선 신규 지정하였으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기업은 배제했다.

특히, 도시재생 등 지역 내 현안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청년이 모여 조직한 익산청년드림협동조합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됐다.

신규 지정은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시군의 합동 현지실사 ▲소위원회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을 거쳐 진행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가 지원 연차에 따라 1년간 지원된다.

이번 2018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120개, 예비 사회적기업 50개로 총 179개소가 운영하게 됐다.

/김진성 기자

6륜 구동 특장차·부품 판로개척 나서

전북도-자동차융합기술원 6X6 오스트레일리아와 협약

전북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주)유로모토는 중소형 SUV 차량을 적용한 협지 주행이 가능한 6륜(6X6) 구동 특장차를 개발하고 관련 부품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6X6 Australia' 대표를 초청하여 '기술제휴 및 수출거점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6X6 Australia'사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소재한 특장차 업체로 4륜(4X4) 구동 SUV에 구동축을 더하여 오프로드 및 다목적용 6륜(6X6) 구동형 차량을 30년 이상 개발, 제작하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유로모토,

'6X6 Australia'사는 국내 생산 중인 다양한 SUV 차량에 6륜(6X6) 장치를 위한 기술검토가 긍정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호주 지역으로는 고품질의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국내 차량에 적용한 6륜 구동 특수차량 기술개발을 통해 중동 및 호주시장 등에 연간 300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협력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바이어 초청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업무협약과 더불어 전북도내 특장차 기업과 상용차 부품 기업 등 6개사를 방문, 기술 개발 및 수출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사장 전략회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규명)는 오는 29일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1분기 지사장 전략회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지사장 전략회의는 관내 12개 지사장, 본부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추진 실적 점검 및 사회공헌활동, 4대폭력 예방활동 강화, 춘절기 안전관리, 직원복지기금 확립등을 강조하고 기타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수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